

한국이 보는 베트남전쟁: 쟁점과 논의

이한우*

- I. 머리말
- II. 베트남전쟁의 성격과 한국군의 위상
- III. 한국군 파병 결정요인
- IV. 베트남전쟁 참전의 한국사회에 대한 효과
- V. 베트남전쟁이 던져준 과제
- VI. 맺음말

한국사회에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의 성격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견해는 베트남전쟁이 자유수호전쟁인가 베트남 민족해방전쟁인가로 대별된다. 1964년부터 열전을 치른 베트남전쟁이 1954년 제네바협정의 유실로부터 비롯된 것인 한, 민족해방전쟁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결정 원인은 미국에 대한 보은, 미국의 강압, 한국안보를 위한 대체 파병, 정치적, 경제적 이해 등 복합적인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어느 이해가 주된 원인이었는가에 대하여는 논쟁적이다. 그러나 한국이 베트남전 참전을 통하여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박정희 정부의 권력 강화와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아직도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미해결의 과제를 안고 있다. 참전군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와 실종자 문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 등이 그것이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있어서 양국은 불행했던 과거를 접어두고 미래를 위한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여기서, 과거의 과오가 있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두 차례에 걸친 논문심사과정에서 날카롭고 유익한 비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다면 이를 덮어두기만 하기보다, 양국간 유대 강화라는 미래지향적 목표하에 반성적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베트남전쟁, 한국군, 용병, 학살, 민족해방, 경제성장

I. 머리말

베트남전쟁이 끝난 지 30년 되었다. 우리가 베트남전쟁이라고 하면 흔히 1964-75년간 남북 베트남 및 지원국간에 열전이 치러진 전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1946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베트남은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 식민통치를 받다가 1940년 일본의 침략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귀속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마감짓는 일본의 항복선언이 있은 후 1945년 9월 2일 독립을 선포한다. 그러나, 프랑스가 다시 식민 지배를 추구하고자 베트남에 개입하면서 1946년 말부터 베트남전쟁은 시작되었다. 1946-54년간 베트남과 프랑스와의 전쟁을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 1964-75년간의 전쟁을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이 끝나며 체결한 제네바협정에서 남북 베트남으로 분단된 것이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의 주요 요인이 되었으므로, 두 전쟁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베트남전쟁은 1946-75년간의 30년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국과의 관련성을 논하는 이 글의 취지에 맞춰 1964년부터 1975년까지의 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베트남전쟁은 제3세계의 한 가난한 국가가 최강대국 미국에게

패배를 안겨주었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셀 수 없는 고통을 준, 현대사에서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한국은 1964년 9월 비전투 부대인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하여 1973년 3월 철군을 완료하기까지, 연인원 32만여 명을 파견한 바 있다. 그들 가운데 약 5,000명은 주검으로, 약 16,000명은 부상을 입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의 병력을 베트남에 파견한 한국 및 한국민은 10년간의 베트남전쟁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전쟁이 한국 및 한국민에게 남겨준 것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전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산주의 '집단'인 북부와 자유주의 '국가'인 남부간의 무력투쟁인가, 아니면 베트남의 통일을 위한 민족해방전쟁인가? 또한,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의 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둘째,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의 요인들은 무엇인가? 한국군의 파병은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보답과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행위였는가?

셋째, 베트남전쟁이 한국사회에 남긴 문제는 무엇인가? 오랫동안 무관심 속에 버려두었던 한국인 2세, '라이파이한', 참전군인들의 희생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1999년 5월부터 한국 내에서 제기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베트남전쟁 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는 어떤 맥락에서 전개되었고, 그 쟁점은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그간 한국 내에서 제기된 상반된 주장들을 병렬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인들이 베트남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 베트남전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상이한 시각의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쟁점들 하나 하나는 별개의 연구로서 실증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만한 것들이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을 부각시키고 그 논의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한정하고, 각 쟁점에 대한 개별적 분석은 별도의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한다.¹⁾

II. 베트남전쟁의 성격과 한국군의 위상

1. 자유수호전쟁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개입의 논리는 공산주의 팽창의 '도미노 이론'이었다. 이 논리는 1949년 중국의 공산화, 1950년 한국전쟁과 중공군의 개입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의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개입의 기본 논리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북베트남(베트남민주공화국)의 무력침공에 대한 남베트남(베트남공화국)의 자위권 발동이며, 남양(南洋) 지배를 위한 '중공'(中共)의 전쟁에 대한 미국 및 연합국의 집단조치라고 규정하였다(김기태 1982, 58). 미국은 이 논리상에서 베트남과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을 치루고 있던 프랑스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였고, 1954년 동남아시아

1) 이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각 쟁점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한 논문에서 많은 쟁점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며, 실증할 수 없는 쟁점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쟁점을 부각시키고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한국인들이 베트남전쟁을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아조약기구(SEATO) 창설을 추진하였다.

도미노 이론은 1964년부터 격화된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미국의 주장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하여 남부에서 게릴라활동으로 남베트남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도 이와 같은 것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당위성으로 ‘중공’의 위협과 공산주의 확산의 도미노에 대한 경계를 언급하였다. 1960년대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세력 확대에 대해 매우 민감하였고, 공산주의 위협의 억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외교정책도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 홍규덕(1992)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6.25 남침이 1960년대 한국의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의 원조와 공약이 유지되는 것만이 전쟁으로 황폐된 경제를 복구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며,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유세계의 국제적 연대가 공산침략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의 도미노이론과 ‘중공’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반대운동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자유수호론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전쟁이 공산 ‘월맹’(북베트남)이 자유 ‘월남’(남베트남)을 무력침공함으로써 발발한 것이고, 합법적 정부인 응오딘지엠(Ngo Dinh Diem) 정부에 대한 침략전쟁이라고 본다.²⁾ 또한 남부 베트남에서 조직한 ‘베트남남부해방민족전선(NLF)³⁾의 군사조직인 ‘베트콩’에 대하여 북베트남이 군사적

으로 지원하였고, 소련과 '중공' 두 강대국이 배후에서 무기와 군수 물자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월맹'과 '베트콩'의 합작공격은 동남아시아에서 국제공산주의 세력 확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베트남전쟁이 이러한 국제공산주의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여영무 2001, 5-7).⁴⁾

2. 민족통일 · 해방전쟁

자유수호론이 베트남전쟁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이념전쟁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베트남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한 시각이 1970년대 중반부터 제시되었다. 그 선구적 학자로 리영희(1985)를 들 수 있으며, 이후 이삼성(1998), 강정구(1996; 2000; 2002) 등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

2)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은 남베트남을 '월남', 북베트남을 '월맹'이라고 칭하였다. '월남'(越南)은 베트남(Viet Nam)의 한자어 표현이다. '월맹' 또는 '베트민'(Viet Minh)은 '베트남(월남)독립동맹'(Viet Nam Doc lap Dong minh)의 약칭으로 1941년 호찌민을 중심으로 인도차이나공산당이 주도하여 만든 범민족독립운동조직이다. 1945년 9월 2일 '월맹'의 주도로 베트남 전역에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프랑스의 간섭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과 프랑스는 1946-54년간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을 치른다. 1954년 제네바협정에서 17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잠정적으로 분단한 후 2년 이내에 전국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로 규정함으로써, 북베트남에는 베트남민주공화국, 남베트남에는 베트남국(1949년 수립, 1955년 10월 이후 베트남공화국)이 존재하게 된다. 베트남전쟁 시 한국은 남베트남과 국교를 맺어 '월남'이라 하였고, 북베트남을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하지 않아 '월맹'이라고 칭하였다.

3) 일반적으로 '민족해방전선'(NLF: National Liberation Front)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영어로 된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좀 더 엄격히 하자면 '베트남남부해방민족전선'(Mat tran Dan toc Giai phong Mien nam Viet Nam)이라고 해야 한다.

4) 자유수호론자들은 베트남전쟁을 1964년 킴강만 사건과 1965년부터의 열전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1954년 제네바협정에서 규정한 향후 2년 이내 전국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 규정을 남베트남이 준수하지 않은 것의 중요성을 도외시한다. 이들은 1954년 제네바협정, 남베트남의 총선거 거부, 1960년 베트남남부해방민족전선 결성, 1964년 킴강만 사건, 1965년 열전을 연속선상에서 보기보다는 계속된 공산위협을 강조한다.

리영희는 베트남전쟁이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침략이 아니라, 베트남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가로막는 프랑스 및 미국과 이의 후원 하에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남베트남(1949년 수립된 베트남국, 1955년 10월 이후 베트남공화국)을 한편으로 하고 베트남 민중과 북베트남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민족해방전쟁이었음을 간파하였다. 그는 베트남전쟁이, 열전이 치러진 1964-75년간의 전쟁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가 다시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하여 베트남 땅에 들어온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1946-54년간의 베트남과 프랑스간의 전쟁이 베트남의 승리로 끝나고 맺어진 제네바협정에서 2년 이내에 총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였고, 남북을 분단하는 17도선은 임시적 군사분계선이며 국경선이 아니었음에도, 프랑스는 총선 기한 직전에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여 그 의무를 방기하였고, 그 의무를 계승한 남베트남이 총선거를 거부함으로써 전쟁이 계속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은, 프랑스가 1949년 6월 바오다이(Bao Dai) 왕을 앞세워 수립한 프랑스연방 내 베트남국을 1950년 2월 승인하고 그 해 12월 방위 및 상호원조에 관한 협정을 맺고 군사적 지원을 하는 등 일찍부터 베트남과 프랑스간의 전쟁에서 프랑스를 지원함으로써 베트남에 개입하였고, 제네바협정 이후에는 남베트남에 응오딘지엠(Ngo Dinh Diem)이라는 반공, 친미 인사를 국가원수로 앉히는 등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깊숙이 베트남 내정에 개입하여 제네바협정을 위반하게 함으로써 분단을 고착화시켰다고 한다. 즉 제네바협정을 파기한 당사자가 남베트남, 프랑스와 미국이며, 이로써 제네바협정 자체가 무효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1964년부터 열전을 수행하는 데 기폭제가 된

5) 리영희의 『베트남전쟁』은 1985년 출판되었으나, 이 책에 실린 논문 베트남전쟁(I), (II)는 이미 1970년대 중반 『전환시대의 논리』에 발표된 글이다.

1964년 8월 2일 및 4일의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였고, 그 이전부터 전쟁확대계획을 가지고 공작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남부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 특히 1960년 12월 조직된 베트남남부해방민족전선이 북베트남의 지시와 지원에 따라 활동했다는 기존의 견해를 뒤집고, 그 권력기반이 남부 내에 있었음을 지적하였다.⁶⁾ 즉, 남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세력 확대는 남부 정권의 반민족성과 비민주성에 주요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삼성(1998)은 기존의 수정주의적 입장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베트남에 대한 미국 제국주의 개입이라는 시각에서 리영희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도 또한 베트남전쟁의 기원을 1954년 제네바 협정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미국의 개입으로부터 잡고, 당시 미국이 베트남을 이미 실질적인 미국 식민지로의 전환 작업을 시작하였고 응오딘지엠을 통하여 분단 영구화를 추구하였다고 보았다. 미국은 독재에도 불구하고 지엠(Diem) 정권을 계속 지지하였던 반면, 대부분 남부 사회에서는 남부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토지개혁 등을 통하여 민중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북부 베트남공산당의 지원과 결부되어 그 영향력 하에 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은 북베트남, 사이공 정부, 미국을 주요 게임 플레이어로 하는 모의 '전쟁 게임'을 통하여 제한적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이 북베트남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다량의 자원을 투입해야만 승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소개한다. 이처럼,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군사

6) 이러한 남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최병욱(2003)은 통일 이전 베트남 남부의 갈등은 남베트남 정권의 북부적 기반에 있음을 지적한다. 즉 북부 출신 정치지도자들이 남부 정권을 장악한 것에 대해, 남부인들이 저항한 것이 바로 남부의 갈등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념적 지향 및 민족주의적 정통성을 누가 가졌는지와는 무관하게 지역적 이해로 인한 갈등의 측면을 부각시킨 연구결과다. 즉, 베트남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기보다는 '내전'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적 시각에 집중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남부의 베트남남부해방민족 전선과 민중간의 유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고 한다. 결국, 민중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제국주의와 결합한 독재정권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였다는 것이다.⁷⁾

강정구(2000; 2002)는 베트남전쟁을 반제국주의, 사회주의, 민족해방혁명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에 내재한 보편적 역사지향인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사회주의혁명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에 따라 대부분 좌절되고 단지 몇 개 국가만이 이 고유의 보편적 행로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 베트남이 대표적인 전범이라고 한다(강정구 2002, 73). 그는 미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제네바협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베트남이 1956년 7월까지 전국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독립국가가 되었을 터인데, 분단 이래 남부에서 지엠 정권이 제1차 ‘민족해방전쟁’(인도차이나전쟁) 참전 항불 전사들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남부해방민족전선과 남베트남인민해방군이 설립되면서 지엠 정권의 무력독점이 깨지자, 미국이 남베트남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1961년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남베트남 군사원조사령부를 설치하고 마침내 1964년 톤킨만 사건을 조작하여 대대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한 것이었다고 보았다(강정구 2000, 46). 그의 주장은 베트남전쟁의 주된 행위자는 미국이었다는 것이다.

7) 이들의 연구는 제3세계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을 부각시켜 기존의 시각을 교정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베트남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시기별 질적인 차이를 역사적으로 실증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다른 연구들은 처음부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베트남의 상황전개에 따라 파병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1961년 11월 당시에도 케네디는 베트남에 미국의 정규전투부대를 보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다고 한다(홍규덕 1992, 26).

3.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위상

베트남전쟁을 자유수호전쟁 또는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에 참전한 한국군의 위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베트남전쟁을 전세계적 반공전선에서 자유진영의 수호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규정한다면 참전 군인들은 자유수호 용사들일 것이고, 민족해방전쟁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들은 베트남 민족의 해방과 통일을 가로막은 세력일 것이다. 그들이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강요에 의해 참전했다면 동원군일 것이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돈을 벌기 위해 참전했다면 용병일 것이다.

한국군 참전용사들은 여전히 자신을 자유수호 용사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용병론 또한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용병론은 동맹국들을 참전시킨 미국의 정책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용병론은 미국 의회 내 반전 움직임과 미국 사회 내 반전운동가들에게 미국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했으며, 북한이나 북베트남이 선무공작의 차원에서 한국의 용병설과 잔학상을 세계적으로 퍼뜨리기도 하였으며, 한국은 이러한 대가로 필요 이상으로 유명세를 물게 되었다고 한다(홍규덕 1992, 34).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군의 위상에 대한 평가에서 용병이었음을 긍정하는 견해가 제출되었다. 미국은 1970년 2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사이밍턴(Symington) 청문회에서 한국군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전투수당과 사상자수당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공개됨으로써,⁸⁾ 미국의 재정적 지원하에 한국군 파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유수호를 위해 싸웠다는 명분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명예롭지 못한

8) 미국은 처음부터 모든 베트남 주둔 한국군에게 장비와 수당을 지급하였다. 한국은 1966년 3월 '브라운 각서' 이후에도 베트남 주둔 한국군의 기본봉급을 계속 지급하였다(김기태 1982, 123).

것이었다는 평가다(홍규덕 1999, 94). 폴브라이트 상원의원도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전쟁의 종결을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한다(홍규덕 1992, 34).

한국 내에서도 경제적 실리를 위해 베트남에 파병하는 것에 부정적 견해도 있었다. 당시 야당인 민중당 의원 조운형은 “미국이 3차 대전을 각오하고 월남전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아는 우리는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의 기회가 온다는 전제하에 월남에 참전하여야 할 것”이라고 파병을 찬성하면서, “지나친 상업적 계산은 오히려 고차적인 대의명분과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지 않는가 염려된다”고 주장하였다(한홍구 2003, 127에서 재인용). 박정희 또한 “미국이 어려운 틈을 타서 우리가 타산적으로 나간다면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한다(한홍구 2003, 129에서 재인용).⁹⁾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주장은 한국 정부 관료들과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들고 나왔다. 당시 외무장관 이동원은 “베트남전쟁이 국가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상품수출시장일 뿐 아니라 사회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노동수출시장이며, 베트남 파병은 ... 미국의 달러화를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던 것”이라며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취할 것을 주장하였고, 국방장관 김성은도 “경제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군사력의 유지를 위해서” 베트남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최동주 1996, 272-273에서 재인용). 1966년 3월 베트남 지원을 위한 국군 증파에 관한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차지철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미국의 선행조건 이행이 없는 한 추가파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기

9) 파병과정에서 박정희의 유보적 자세는 경제적 이득이라는 실리보다는 자유수호라는 명분을 앞세워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의견은 여당 의원 및 정부 관료들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제시되었다.

위하여 베트남 파병이 고려되었다(홍규덕 1999, 74).

박정희 정부가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하여 한국군을 파병한 것이 분명한 만큼 베트남 파병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군 개인들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 곳에 간 것이 아니었기에 이들을 용병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다.¹⁰⁾ 홍규덕(1999)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파병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있었기에 용병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견해라고 한다. 당시 대학에 다니는 많은 젊은이들조차 자원하여 베트남전선으로 갔고, 베트남전쟁은 국민들에게 시련의 장소이기보다는 새로운 자신감과 도전의 장소로 비쳤다는 점에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하여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베트남 주둔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채명신(2006)도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용병일 수는 없었다고 한다(51-56).

III. 한국군 파병 결정요인

한국군 파병은 1964년 4월 발표된 미국의 '우방국 참전 캠페인'(More Flags Campaign)의 선상에서 추진되었다. 한국은 1964년 7

10) 베트남전 참전 결정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고, 개인들이 국가의 명령에 의해 참전한 것이라면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전쟁의 성격규정에 따라 스스로를 규정해야 할 책무는 없을 것이며, 국가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참전을 강요한 것이라면 용병의 누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단지 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개인'들은 용병이 아니며, 당시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서라도 이득을 추구하려면 '국가'에 의해 동원된 것이라고 해야겠다.

월 130명의 의무병으로 구성된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 교관단 파병을 결정하여 동년 9월 이들을 사이공에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965년 1월 국회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비전투부대인 공병 및 건설지원단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비둘기부대 파병을 결정하였고, 이어 1965년 8월에는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만으로 전투부대인 청룡부대(해병 2여단), 맹호부대(수도사단) 약 2만 명의 파견을 결정하였으며, 1966년 3월 백마부대(9사단) 약 2만 명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1966년 4월 맹호부대의 추가 파병, 1967년 6월 병력보충을 위하여 3천 명의 추가 파병 등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1964년 이래 1973년 철수하기까지 베트남 파견 한국군은 연인원 325,517명이었으며, 베트남 주재 병력은 최대 5만 명에 이르렀다.

베트남 파병에 대한 논의는 그 결정이 주체적인 것이었나 강압에 의한 것이었나, 주체적인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안보적 이유 때문인가 경제적 이익 때문인가 등 논란이 많다. 최근에는 베트남 파병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미리부터 결정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상황전개에 따라 다른 목표를 추구했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또한 상호 연계되어 있으나, 대체로 외부적 압력을 주장하는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안보 또는 미국과의 동맹의 측면을 중시하고, 자주 외교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경제실리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1. 안보론 또는 동맹론

1980년대까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연구의 주류는 안보론적 시각에 입각하고 있었다. 이 주장은 한국이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으로 공산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연합국의 지원 호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미국의 참전 압력 혹은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한국 정부가 대규모 병력을 베트남에 파견하였다고 한다(Kim 1966; Han 1978; Park 1981; 이기종 1991; 이선희 2001).¹¹⁾

안보론 가운데 좀 더 주체적인 시각은, 만약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견하지 않았다면 베트남전쟁의 격화로 미국이 주한 미군 2개 사단을 베트남에 파견하였을 것이고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여 한반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신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박정희; 이기종 1991, 66에서 재인용). 1965년 당시 미국의 우방국들로부터 전투병력의 추가 파병이 불가능할 때는 미국이 주한 미군 1-2개 사단을 한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이동시킬 지도 모른다는 보도에 이 주장이 근거하고 있다(김기태 1982, 147; 채명신 2006, 46).

이 같은 안보론에 기초한 견해는, 베트남의 공산화가 도미노처럼 동남아 공산화로 이어지고, 이는 한반도 안전보장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것이 곧 한반도 공산화 저지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당시 국방부장관을 지낸 김성은은 한국군 파병의 의미에 대하여, 파병이 “공산주의자들의 팽창정책에 맞서서 미국과 월남(남베트남)을 우방국으로서 친구를 돕고, 6.25 동안 때 입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급하였다(김성은 외 2001). 이들의 주장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미국이 6.25전쟁 때 36,000명의 전사자와 14만 명의 부상자를 내면서 한국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구하였고, 1960년대 초반 한국의 경제수준이 1963년 1인당 GDP가 65 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지원 없이는 자립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미국과 남베트남의

11) 이에 대하여는 홍규덕(1992b; 1999)과 최동주(1996)가 잘 정리하였다.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¹²⁾ 그 주요 목적은 베트남의 공산화와 공산화의 도미노를 저지하여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¹³⁾ 그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와 같은 시각에 기반하고 있었다.

한편, 김기태(1982)는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베트남에 파병한 다른 국가들이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의 회원국이었던 데 반하여, 한국은 SEATO 가맹국도 아니고 단지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군대를 파견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결정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은 한국전쟁 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군대를 파견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었고 거의 미국에 의존하여 한국군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파병 요청에 한국이 거절하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고

12) 한국군의 베트남 파견은, 공식적으로는 남베트남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양국 간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965년 파병 당시 베트남 측은 외국 군대의 베트남 파병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인 맥스웰 테일러도 확전 자체와 제3국 파병안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1965년 4월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미군 15만명, 한국군 21,000명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결정되고,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 테일러는 남베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에 군대 파병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조치하라는 훈령을 받아, 당시 관후이꾸앗(Phan Huy Quat) 정부는 제3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6월 한국정부에 전투병 파견 요청 서한을 보내왔다고 한다(홍규덕 1999, 68). 이처럼 베트남전쟁은 당초부터 국제전의 맥락에서부터 시작하였다.

13) 한홍구(2003)는 당시 박정희 정부의 파병 논거를, 보은론(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자유 우방 16개국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제2전선론(자유 월남의 반공전선은 우리의 휴전선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월남은 한국의 제2전선이라는), 국위선양론(주요 국제문제 대해서 일단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전진적 자세를 취해야 하며 월남을 비롯한 전 자유우방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지원국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으로 정리하였다.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하여 한국 안보를 확고히 하며, 베트남전쟁 참전으로부터 재정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고, 미국의 지원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박정희는 1963년의 선거에서 야당 윤보선 후보에 대해 1%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야당과 학생들의 저항에 처하여 있었기에 미국의 요청에 응함으로써 정치적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도 가운데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한국 안보에 대한 강조였다고 할 수 있다.

2. 능동적 실리론

기존의 안보론에 대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이 베트남전에 파병했다는 주장들이 1990년대 들어 속속 대두되었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적 동기를 갖지 않고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대표하는 학자들로 이기종(1991), 홍규덕(1992a; 1999), 최동주(1996)를 들 수 있다.¹⁴⁾

기존의 견해들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지만 주된 목표라기보다 부수적 목표였다고 보았다. 김기태(1982)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동기에서 경제적 이득이 주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은 1965년 최초 전투사단 파병 시보다 1966년 증파 협상과정에서였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한국이 미국측에 대하여 10개 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군 부대와 베트남 주재 한국 민간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

14) 이기종(1991)은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들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71, 76).

하는 한 조항만이 한국의 외화 획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6년 한국군을 증파하려 했을 때 한국 장병들이 낮은 봉급을 받고 보잘 것 없는 대우를 받고 있었던 데 대한 국내의 불평과 그간의 베트남 파병으로 파병이 외화를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일임을 보여주었기에 국내적 지원을 얻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66년 3월 “브라운 각서”에 베트남 주둔 한국군의 수당 인상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한다(158-160).

이에 반해 1990년대의 수정주의자들은 한국군 베트남전쟁 파병의 주요 목표가 경제적 이익의 추구에 있었다고 한다.

이기중(1991)은, 미국의 요청과 압력에 의하여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는 기존의 시각이, 공산주의 팽창위협에 동일하게 직면했던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소규모 부대 파견에 그친 반면, 왜 한국만이 대규모의 전투병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한국군 베트남 파병 논리가 특히 ‘중공’의 동남아에 대한 위협이 한국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베트남의 적화가 한반도 안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한국군을 파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한 미군의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휴전선 공백상태,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야심이었던 베트남 특수를 통한 경제발전에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국내적으로 정치적 지위가 위협받던 상황 속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함으로써 박정희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 안정시키는 데 있었다고 한다.

홍규덕(1992a; 1999)은 196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미국에 대해 자주외교를 전개했는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1년 11월

미국 방문 시, 미국이 베트남에 정규 전투부대 파병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¹⁵⁾ 미국에게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의사를 제시 하였는바, 이는 미국으로부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으며,¹⁶⁾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미국의 종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의 목표는 한국군의 현대화, 경제개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해외시장진출 등 엄연히 이윤추구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박정희 정부가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파병을 위한 대미 접촉을 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파병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파월기간 동안 군원이관¹⁷⁾ 중지, 베트남 군납을 위한 연안구매국에 한국 포함, 주한미군의 감축 중지 및 사전협의 없는 주한미군 철수 불가 보장, 파월 한국군의 치우개선, 한국군장비의 현대화, 차관 제공 등의 약속을 받아내었다.

홍규덕이 베트남전쟁 파병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자주적 외교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동주는 한국 외교정책의 목표가 처음부터 경제적 이익 추구에 있었음을 강조하여 논한다. 최동주(1996)는, 미국의 다량원조에 의존하였던 한국이 1950년대 말부터 원조 삭감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 조달과 실업 해소를 위한 대안을 찾던 상황에

15) 미국은 1961년말-1962년 초에야 군사고문단 및 군사원조사령부를 설치하여, 비전투 부대의 파병부터 시작하였다(홍규덕 1992, 26).

16) 한홍구(2003)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며 미국의 신임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파병을 제안하였음을 강조한다.

17) 군원이관(軍援移管)이란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중 상용(商用) 소비성 물자를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1959년 양측간에 합의를 보았고, 미국은 1960년 한국산 소모품 중 미국의 군원계획 자금으로 구매되는 것은 한국측이 이를 원화 예산자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군원이관 10개년 계획을 성안하였다. 그 후 1960년과 1961년에 약 1천만 달러 상당의 피복을 한국정부가 부담한 적이 있다. 한국군이 베트남에 주둔하는 기간 동안 군원이관을 중단하였다(김기태 1982, 114-115).

서 베트남 파병이 가져올 경제적 이득을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전쟁의 격화로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 안보 공백을 가져왔으리라는 가정은, 당시 한반도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한국의 자발적 파병 노력은 이승만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기반은 실리에 있었다.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정권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획득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미국이 파병을 서두르자,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이를 지체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미국은 베트남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던 상황에서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은 당시 신중상주의적 대내외정책을 정책기조로 개발지향형 국가(developmental state) 운영을 시작하였던 한국이 베트남전을 자본 획득의 주요 통로로 인식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본다.

박태균(2006)은 미국 외교문서를 주로 참고하여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주한 미군과 한국군 감축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대응책으로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미국은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1950년대부터 주한 미군과 한국군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1960년대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안보에 따르는 부담을 일본에 전가하려고 하였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협상 초기에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 이상으로 능동적으로 파병 의사를 표명하였으나(151-155), 전투병 파병 협상과정에서는 오히려 신중한 태도를 보여, 한국 정부가 한국군 파병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미군의 베트남 주둔보다 한국군의 파병에 따른 비용이 싸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베트남전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156-165).

한편,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은 사전에 어떤 목표를 전제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전개에 따라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선택한 결과로 보기도 한다. 박홍영(2000)은 한국 외교문서에 주로 근거하여, 1964년 7월 비전투요원 파병 시 반공논리라는 확립된 규범과 공통인식에 기반하여 있었으나, 1965년 1월 제2차 파병 시 한국의 안전보장과 도의적 책임의 명분을 내세우나 주요 목적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었고, 1965년 8월 제3차 파병 시에는 경제적 실리를 전면에 내세웠고, 1966년 3월 제4차 파병에서는 경제실리와 국방력 증강이라는 실리를 추구하는데 주요 목표를 두는 것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의 정책목표가 변해왔다는 것이다.

이상의 능동적 실리론자들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 파병 협상과정에서 미국을 상대로 정권의 안정, 안보, 경제적 이익 등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자주 외교를 펼쳤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IV. 베트남전쟁 참전의 한국사회에 대한 효과

1. 대외관계

한국의 베트남 파병의 효과로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대미 협상력

의 강화다. 한국의 베트남 파병의 협상과정 및 이후 대미 관계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증가하여 대외관계에서 보다 더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참가하면서 미국이 지닌 힘의 한계를 직접 체험하였으며 대미협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갖기도 하였다. 한미관계가 비대칭적 구조의 한계가 있었지만 강대국의 곤경을 약소국이 도울 수 있는 전략적 환경에 있을 때 약소국은 상대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기종 1991, 80). 베트남전쟁의 종결과 관련하여서도 미국의 유화정책을 경계하며 조속한 종전에 반대하고 베트남전쟁에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참전국으로서 발언권을 행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66년 11월 및 1968년에 한국군 증파에 대한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하였고, 1971년 주한 미군의 감축에 있어서도 약 15억 달러를 한국군 전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동의하였다(김기태 1982, 138-140). 한국의 협상력 강화는 동남아 외교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1966년 6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료회의(ASPAC)를 창설하여 지역안보기구로 유도하려 하였고, 1966년 10월 베트남전쟁 참전국들이 모인 마닐라 정상회의에서 공산 베트남에 대한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협상력 증대는, 한국군의 참전이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노력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1968년 1월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청와대 습격기도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태도가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1960년대 후반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국 정부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국제적인 비난에 한국이 미국의 정책과 지시에만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과시할 필요에서 미국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김기태 1982, 142-145). 결국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은 미국에 대하

여 일방적인 관계로부터 보다 더 자주적인 상호관계를 추구할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된다.¹⁸⁾

그러나, 홍규덕(1992a)은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자주적 외교를 펼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 전후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한국은 베트남 파병으로 미국과 동반자로의 지위로까지 격상할 수 있었으나, 참전으로 인하여 대외 이미지에 손상을 입어 1965년 제2차 알제리 비동맹회의에 초대받지 못하는 등 비동맹국들로부터 외교적 거리를 두는 대우를 받았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국가에 의료진을 보내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나 이는 미국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미국 의존의 대외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는 또한 1966년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박정희 정부가, 시기상조적인 평화제안은 오히려 자유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매우 위험한 유화정책이라고 경고하고 이 회의를 통하여 집단안보체제 형성을 도모하였지만, 결국 회의는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었고 한국의 시도가 실패한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 외교가 자주적 외교로 변화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한다(홍규덕 1992a, 32-41). 박태균(2006)도 한국군 파병 대가를 한국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구걸'이라고 한 것처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지위는 상승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또한 주한 미군 철수가 한국의 요구와는 상반되게 계속 추진되었다는 점도 한국의 대미 협상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을 지적한다(164-167).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외관계에서의 협상력 강화는 이루어졌으나, 제한적이었다.

18) 이러한 한국의 대미 자주성은, 박정희가 1972년 유신 정권의 출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별로 우려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나타난다(김기태 1982, 169).

2. 군사안보적 효과

파병으로 인한 한국 정부의 협상력 강화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한국군의 군현대화 계획의 첫 단계가 1965-73년간 시행되었는데, 미국의 무상원조에 힘입은 바 크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는 1960년대 초반까지 하강 추세에서 베트남전쟁 기간 중 극대화되었다(이기종 1991, 80).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는 1961-65년간 약 8억 2천만 달러에서 1966-70년간 16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김기태 1982, 139-140).

베트남 참전이 한국군의 군사력을 강화시킨 것은 분명하다. 한국군은 전쟁경험으로 전쟁수행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제릴라전과 미군과의 연합작전 경험은 한국군의 전투력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또한 베트남전쟁으로 한국군은 신예 구축함 2대 도입, 미국의 M-16 소총 국산화 지원, 유도무기 지원, 각종 방위산업 기술 이전 등 무기현대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홍규덕(1999)에 따르면 한국은 1973년 3월 마지막으로 2개 사단이 철수할 때까지 주력전투사단을 베트남에 잔류시켰는데, 이는 베트남전에서 사용하던 현대무기들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미국의 베트남화 전략으로 한국군이 사용하던 무기도 남베트남군에게 넘겨주어야 했기에 단지 1개 연대분의 무기만을 가져올 수 있었고,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는 제한적이었다(84).

또한, 1965년 당시 미국의 우방국으로부터 추가 파병이 불가능할 경우 주한 미군 1-2개 사단을 베트남으로 이동시킬지도 모른다는 보도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주한 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었고, 이 약속은 1971년 주한 미군의 1/3에 해당하는 약 2만 명을 철

수시키기까지 지켜졌다(김기태 1982, 147, 153).¹⁹⁾ 이와 함께 주한 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인 한미행정협정(SOFA)을 1966년 7월 체결(1967년 2월 발효)한 것도 당시로서는 성과였다. 그러나, 한국이 무력공격을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하며 적을 분쇄시킬 것이라고 미국이 수차례 천명하였지만, 한국측이 요구하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협정에는 주한 미군의 범죄에 대하여 미국의 동의 없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제한적이었다(박태균 2006, 167).

한편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북한을 자극하여 휴전선에서의 도발을 증가시켰다.²⁰⁾ 이와 함께 북한은 1968년 1월 청와대 습격 기도사건과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일으켜 안보상 긴장을 증대시켰다.²¹⁾ 이밖에도 북한은 1968년 11월 울진에 무장공비 120명을 침투시키고, 1969년 4월 공해상에서 미국 해군 정찰기 EC-121기를 격추시키는 등 도발을 계속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남한에서 혁명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무장 게릴라를 침투시키는 등 대남 공세를 강화한 것은 북한이 1964년 3대혁명 강화론을 제기하여 남한 내의 혁명역량을 강화하기로 전략을 수립한 선상에서, 베트남전쟁의 게릴라전을 보고 한국에서의 게릴라전에 대비한 기지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조진구 2003, 229). 한편으로 박태균(2006)은 한국이 한반도에서의 안보 불안을 들어 미국으로부터

19) 그러나 박태균(2006)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감축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이견을 제시한다. 예로써 1966년 11월 말 주한 미군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약속했던 51,000명에 못 미치는 43,000명 정도였다는 것이다(166-167).

20) 북한의 휴전선 도발 건수는 1965년 88건, 1966년 80건, 1967년 784건, 1968년 985건으로 급증하였다(이기종 1991, 87).

21) 북한의 도발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복의 성격보다는 북한의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기태 1982, 157).

터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한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고 지적한다(168-169).

미국은 이 문제들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여, 한국이 미국 방위공약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청와대 습격기도사건에 대응하여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 보복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항의하였고, 청와대 습격기도사건을 인정한 뒤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하여 즉각적으로 보복할 것을 요구하여, 당시 외교수단에 의해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송환을 실현하려는 미국과 대립하였다(조진구 2003, 250). 당시 미국의 입장은 베트남전선에서 지쳐 있는 상태에서 북한과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었다(홍구덕 1999, 97). 이런 선상에서 한국이 베트남에서 미국의 유연한 정책에 반대하고 공산주의 세력과의 타협에 반대하고 강경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²²⁾

3. 경제적 효과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의 경제적 효과는 직접 외화 수입과 간접적 이익을 포함하여 2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미국 상원은 일찍이 1973년 대외관계보고서에서 1965-72년간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외화 수익을 10억 3,600만 달러로 집계하였다(『한국일보』, 2000. 5. 3). 최동주(2001)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한 것처럼, 한국은 1965-72년간 베트남에 대한 상업적 수출, 군납 등 무역부문에서 약 2억 8천만 달러와 군인 및 근로자 송금, 사상보상금, 서비스업(용역군납) 및

22) 이는 한편으로 한국이 베트남전쟁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시도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건설업(건설군납) 등 비무역부문에서 약 7억 5천만 달러, 합계 10억 3,600만 달러의 직접적 이익을 얻었다.²³⁾ 이외에도 파병관련 공공차관 5억 2천만 달러, 파병관련 상업차관 2억 4천만 달러, 무상원조 약 1억 7천만 달러를 얻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본 유입을 바탕으로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물론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이, 그 이전의 수입대체산업화 발전전략으로부터 시장주의적 발전전략으로 전환한 결과라는 시각과 국가주도적 발전전략의 효과였다는 두 시각이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영구군비경제'의 일환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으나(정성진 2000, 131-140), 베트남전 특수가 1960-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부정하는 논자는 없다.

베트남전쟁으로 한국이 얻게 된 경제적 이득이 얼마인가에 대한 쟁론은 없으며, 베트남전 특수가 한국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는 대체로 동의하나, 이 경제적 이득의 의미에 대하여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베트남전쟁에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조국 근대화의 기반이 되었다고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조국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것이고(채명신 2006, 492-501), 다른 하나는 참전 군인 및 한국인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동원된 한국 젊은이들의 희생에 주목하는 것이다. 대체로 자유수호론자들은 전자의 입장인데, 한 논자는 베트남전 특수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에너지였다고까지 평가하기도 한다(지만원 2000, 2). 민족해방론자들은 후자의 시각을 취하는 경향이며, 다른 나라의 불행한 기회를 틈타 경제적 이익을 본다는 도덕적 문제

23) 朴根好(1993)는 10억 2,200만 달러로 집계하였다(19).

를 미루어 두고 경제적 실리만을 계산하더라도 그 피의 대가가 오히려 부족하였다고 평가한다(한홍구 2000a, 122-123).

4. 국내정치적 영향

베트남 파병이 박정희에게 가져다 준 것은 국내정치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지지와 경제성장을 통한 정통성 획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자유수호론자들이 베트남 파병의 국내정치적 효과로 국내정치적 안정을 드는 데 반하여, 민족해방론자들은 군사정권 강화를 강조한다.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신임을 얻기 위한 박정희의 노력은 쿠데타 직후부터 시도되었다. 당초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후 1961년 11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의 케네디에게 먼저 베트남 파병을 제의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환심을 사려는 시도였다. 이는 물론 미국의 거부로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베트남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의 한국군을 파병하여 미국의 신뢰를 획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정치에서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시발점이었다.

한홍구(2003)는 1973년 베트남으로부터 한국군의 철수 후 후방사단, 동원사단 20개를 창설하여 군 고위직의 숫자를 늘리는 등 군부에 혜택을 줌으로써, 박정희 정권이 미국과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독재권력을 행사하면서 한국사회 전체를 병영국가로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의 지지와 경제성장을 통한 정통성 확보로, 박정희는 3선 개헌과 유신체제 수립 등 독재권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별다른 제재나 간섭을 받지 않았고, 장기집권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135-136). 홍석률(2005) 또한 파병협상과정에서 박정희가 미

국의 요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양국 정상 간의 동맹을 형성하고 정권의 지지를 확보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281-289).

V. 베트남전쟁이 던져준 과제

1. 참전군인들의 상처

1) 실종자 문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 가운데 사망자는 5,066명, 실종자는 8명, 포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베트남전쟁에 32만여 명이나 파병했는데도 포로가 없고 실종자가 그 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군 사망자수도 1973년에 3,844명, 1985년에 3,806명, 1992년에 전사자 4,687명을 포함한 5,051명, 1994년에는 전사자 4,650명을 포함한 5,066명으로 시기별로 변하여 신뢰를 주지 못하였다(『한국일보』, 2000. 4. 29). 이후, 전사자수는 1999년 자민련 안보특별위원회에서 5,083명, 2000년 4월 6일 AP통신에 의해 5,077명으로 추산되기도 하였다(『한국일보』, 2000. 4. 29).

전경수는 1994년 4월 한국사회사연구회 발표회에서 “베트남전쟁 동안의 한국군 포로와 실종자”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미군이 종전 당시 591명의 포로를 넘겨받았고 1,000여 명의 나머지 포로문제를 놓고 협상하였는데, 한국군 파병 10년간 단지 8명의 실종자만

이 존재한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임호준, 『주간조선』, 1994. 5. 5; 김당, 『시사저널』, 1994. 5. 12). 그의 논거는 한승주(Han 1978)가 집계한 한국군 전사자 4,000명과 국방부 집계 4,900명 간의 차이인 900명 정도가 생각해볼 수 있는 최대치의 실종자 또는 포로의 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베트남전은 전선을 형성한 상태에서 진격과 후퇴를 거듭하는 공방전이 아닌 게릴라전이었기 때문에 포로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부정하였다. 국방부가 실종자수를 처음 밝힌 것은 1973년 3월 전사자로 처리됐던 한 병사가 석방되었다고 보도된 뒤 7명이라고 명단을 밝힌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후 1985년 국방부가 펴낸 『파월한국군전사』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1992년에는 실종자수를 3명으로 발표하였고, 1994년 다시 8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종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한국일보』, 2000. 5. 2).

이와 함께, 베트남전쟁 기간에 베트남에서 일했던 한국인 민간인수는 연인원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00년 공개된 미국 국방부 문서에서는 한국인 민간인 실종자가 8명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아직 생존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한국일보』, 2000. 5. 1).

2) 신체적, 정신적 상해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여 사망한 5,066명의 전사자 이외에도, 한국군 부상자는 약 16,000명에 달한다.

1991년 호주에 정착한 한 교민을 통하여 베트남전 참전자 중에 고엽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국내에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고, 1992년부터 참전용사와 국내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해 고엽제 후유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여(박균열 2005, 102), 1993년 2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한국일보』, 2000. 5. 3).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까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약 22,000명,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약 57,000명,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46명, 합계 약 80,000명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다.

베트남전쟁 참전 한국 군인들의 정신적 상처에 대하여는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단지, 소설 속에서 이들의 고통을 그렸고, 영화에서 표현되었을 뿐이다. 미국의 초기 반전영화로 대표되는 〈디어 헌터〉에서 러시안 룰렛 게임에 빠져든 미군 병사가 미치지 않으면 이 전쟁을 견뎌내기 힘든 것이었음을 보여주듯이, 안정효의 소설 〈하얀전쟁〉에서도 베트남전쟁에서의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한 병사를 그렸다.

보훈병원 추정에 의하면 2000년 현재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들 중 5-10%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을 앓고 있어, 그 수는 1만 5천 명 이상이라고 추산된다(한홍구 2005, 40). 한국사회에서는 최근에야 PTSD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평화박물관 건립위원회가 2005년 10월 7일 “정신의학자가 본 전쟁의 상처”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다(『한겨레21』, 제580호, 2005. 10. 11).

2. ‘라이파이한’

‘라이파이한’이란, ‘혼혈’이라는 의미의 ‘라이’(Lai)와 대한민국의 ‘대한’을 지칭하는 ‘다이한’(Dai Han)의 합성어로,²⁴⁾ 베트남전쟁 기간중 베트남에 주재하던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한국인 혼혈아를 말한다. 3천 명에서 3만 명까지로 추산되는(『한겨레21』, 제258호, 1999. 5. 20; 박균열 2005, 103) ‘라이파이한’은 베트남전쟁 시기에는 크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1975년 베트남이 통일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됨으로써 한국과의 교류가 끊김에 따라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1980년대 후반에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통해 문호를 열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인 아버지들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로 되어 왕래할 수 없었기에 자신들의 자녀를 돌볼 수 없었고, 한국정부도 이들에 대한 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단지 양국과의 교류가 재개된 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개인들과 종교계가 관심을 갖고 기술학교를 세우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²⁵⁾

3. 민간인 학살 의혹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은 일찍이 1976년부터 제기되었다. 예로써, 웨이커 교도인 마이클 존스 부부가 한국군 청룡부대 주둔지역에서 잔학상을 조사하여 1976년 발표했는데 42건에 걸쳐 약 3,800명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는 것이다(홍규덕 1992, 34). 한국인에 의해서는, 호찌민시에 체류하며 대학원

24) 베트남어대로라면 ‘라이다이한’이라고 해야 할 것이나, 한국사회에서는 ‘라이파이한’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이한’을 넣어 만든 용어의 다른 예로, 호찌민시 외곽에 있는 ‘싸로 다이한’(Xã lỵ Đại Han: 대한도로)을 들 수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에 의해 건설되어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25) 예로써, 김영관 목사는 1991년 4월 휴먼직업기술학교를 설립하여 1,300여 명의 ‘라이파이한’ 졸업생을 배출하였다(『한겨레21』, 제258호, 1999. 5. 20). 이제는 베트남전쟁 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30대 이상으로 장성하여, 이들 외에 베트남 개혁과정에서 진출한 한국기업 종사자들과의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신 라이파이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과정을 밟으면서 『한겨레21』 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구수정에 의하여 1999년 5월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1999년 5월 6일자 『한겨레21』 제256호에 “아, 몸서리쳐지는 한국군!”이라는 제목으로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쓴 그의 기사는 “1969년 10월 14일 베트남 남부 판랑(Phan Rang) 지역에서 남한 군인들이 린선(Linh Son)사 스님들을 향해 총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행하였다. <AFP 통신>은 이 사건으로 ... 4명이 사망한 사실을 베트남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고 보도했다”고 베트남 군대 신문인 『인민군대』지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외에도 1966년 1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국군 맹호부대 3개 소대를 포함한 보안대 및 민간자위대에 의해 빈딘 성, 파이선 현, 파이빈사에서 1,200명의 주민이 학살당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한국군에 의한 최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례다. 이러한 민간인 학살 주장은 『한겨레21』 제273호에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미군보다 잔인했던 ‘용병’” 등으로 이어져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한국과 베트남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당초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고, 여러 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마침내 한국 언론에 이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²⁶⁾

그에 따르면, 베트남 문화통신부가 파악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자수는 약 5,000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지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지역에 따라 주민들이 주장하는 희생자 수

26) 구수정은 “Su Can du cua Quan doi Han Quoc trong Cuoc Chien tranh cua My tai Viet Nam(1964-1973)”[베트남에서 미국 전쟁 중 한국 군대의 영향, 1964-1973]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2000년에 완성하였다. 그는 여기서 베트남전쟁이 끝난 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베트남에 비통함이 존재하며, 한국이 이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고, 베트남과 한국의 국민은 상호 이해를 높이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함께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가 문화통신부가 공인한 수의 두 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구수정 1999, 177-178). 그는 앞서 언급한 1,200명 이외에도 양민학살 사례로, 1965년 12월 22일 빈딘 성, 투이푹 군, 폭호아 싸, 턴지양 촌에서 50여명, 1965년 푸옌 성, 투이호아 현, 호아히엵 싸에서 세 차례에 걸쳐 45명, 35명, 42명, 꾸앙응아이 성, 빈선 현, 빈호아 싸에서 430명 등 여러 사례를 들었다(『한겨레21』, 제256호, 제273호). 이 외에도 『한겨레21』은 1968년 2월 12일 꾸앙남 성, 디엔반 현, 풍니 촌 및 풍넛 촌에서 60여 명, 1968년 2월 25일 꾸앙남 성, 디엔반 현, 디엔중 싸, 하미 마을에서 135명의 민간인들이 한국군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보도하였다(제356호, 2001. 5. 3). 강정구(2000)는 『한겨레21』의 실태조사로 약 9천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이 숫자를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것은, 베트남전쟁이 게릴라전이었고 게릴라전에서는 정규군 전사자가 많게 마련인데, 한국군 전사자보다 게릴라 전사자가 10배 가까이 많았다는 사실은 민간인 학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8).

이에 대해 베트남 주둔 한국군 초대 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소문조차 들어보지 못했으며 베트남 민간인 학살 주장이 베트남인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하였고, “100명의 베트남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것이 한국군의 기본 전략방침이었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죽은 자들이 민간인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겨레21』, 제287호, 1999. 12. 16). 그는 또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주장이 한국인과 [남]베트남인 간의 이간책으로써, 그 이간책은 당시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군 심리전 요원에 의해 기획되었다고 하였다(채명신 2006, 487-488).

민간인 학살 주장에 대하여 여영무(2001)는 베트남전쟁이 “전선

없는 전장'이었다고 한 것처럼,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별이 없고 게릴라전 위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베트콩'들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급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정황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베트콩'으로 오인하여 살상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하였다(31-33). 또한 한국군에 대한 선무공작 차원에서 민간인 학살을 과장하였다고 한다. 이선희(2000)는, 당시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자들이 대부분 해방전선(베트콩) 출신들로서 베트남전 당시 대항하여 싸웠던 적들인바, 이들이 거짓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사건 당시의 전투작전에 연관된 상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으로 오도된 감성에 호소하여 왜곡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거로서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증거는 당사자의 자백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주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 주장은 허구라고 하였다(28-29).

이러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 문제는 1999-2000년 내내 한국 사회를 달군 대단한 사건이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세웠고, 『한겨레21』은 베트남 양민학살 피해자 가족을 위한 성금 모금 행사를 전개하였다. 이런 선상에서 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주관으로 “베트남 민중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라는 제하의 한국군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한국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850명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한겨레신문』, 2000. 1. 1).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전개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운동에 반발하여 참전군인들은 한겨레신문사에 난입하기에 이르렀고,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주장하는 인사들과 이에 반대하는 참전군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들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대립을 완화

하기 위하여 공동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2000년 12월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군사평론가협회와 공동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재조명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구수정의 문제 제기로 베트남 민간인 학살현장을 찾는 작업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가 여러 편 출판되었다. 김현아는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2002)에서 민간인 학살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의 현장을 재구성하였다. 그는 또한 『전쟁과 여성』(2004)에서 전쟁의 피해자를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 남성들 위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 못지 않은 전쟁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겪은 여성의 고난을 설명하였다.

민간인 학살 의혹에 관한 연구는 아니나, 이용준은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베트남 중부지역에 학교 40개를 세워주는 사업을 담당한 외교관으로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잊혀진 전쟁의 상흔을 찾아서』(2003)를 출판하였다. 여기서 그는 향후 한국과 베트남이 과거사의 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현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였다.

이렇게 양자 간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우회적 사과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VI. 맺음말

한국사회에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의 성격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베트남전쟁을 자유수호전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트남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하여, 어떤 이는 한국군이 자유수호를 위해 원정군 자격으로 파견되었고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이는 한국이 부정의한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하여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고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베트남전쟁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전쟁이었으면서 동시에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격전이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이념전쟁의 측면이 강조된 반면, 그 내면의 베트남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위한 민족해방전쟁의 측면이 가려졌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베트남전쟁을 자유수호전쟁인가 민족해방전쟁인가로 성격 규정하는 문제와 한국군의 베트남전에서의 위상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한국군이 미국의 이해에 실린 용병이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희박하며, 자유수호론자들이 한국군이 용병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선상에서 베트남전쟁이 민족해방전쟁임을 부정하는 논리 또한 그 근거가 약하다. 1964년부터 열전을 치른 베트남전쟁이 1954년 제네바협정의 유실로부터 비롯된 것인 한, 민족해방전쟁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베트남전쟁에 개입했던 자유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현실주의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는 자유진영의 베트남 개입이 과오였음을 말해준다. 현재의 시각만으로 1960, 70년대의 베트남전쟁을 재단할 수는 없지만, 한국사회에서도 베트남전쟁의

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베트남 파병 의도에 대한 논쟁은 단일한 의견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한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하여는, 당시 한국 정부가 이념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자유진영의 편에 서게 되었고, 그 결과 베트남의 통일을 저해했던 것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현실주의적인가 이상주의적인가에 따라 베트남전 파병의 정당성과 역사적 과오라는 판단으로 의견이 갈리며,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든 미국에 대한 보은 또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나 주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나로 구별되며, 한국이 추구한 주된 이해가 안보적 또는 정치적 이해였나 경제적 이득이었나로 구분된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결정 원인이 복합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해야겠지만, 한국이 베트남전 참전을 통하여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박정희 정부의 권력 강화와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한국 정부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시각이 부분적으로 변화였다. 1998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간의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하였고, 2001년 8월 방한한 쩌득르엉(Tran Duc L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우회적으로 공식 사과하였다. 이에 국내 보수적 언론과 인사들은 반(反)대한민국적 역사관의 표출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한나라당 성명, 박근혜 의원의 비판,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 282-284). 이처럼 근래에 와서도 베트남전쟁이 자유수호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인사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이 전통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미해결의 과제를 안고 있다. 참전군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와 실종자 문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근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있어서 양국은 베트남전쟁 시 이념적 대결을 뛰어넘어 화해의 악수를 하였고 불행했던 과거를 접어두고 미래를 위한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여기서, 과거의 과오가 있다면 이를 덮어두기만 하기보다, 양국 간 유대 강화라는 미래지향적 목표하에 반성적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노력이 부분적이거나 실현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다.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불행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때 양국관계의 기반도 단단히 다져질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구. 1996.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의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제2호.
- 강정구. 2000.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민간인 참상.”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군사평론가협회.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재조명 토론회 자료집』, 2000. 12. 25.
- 강정구. 2002. “미국 패권주의의 동아시아적 대안, 베트남.” 『황해문화』, 통권 제36호.
- 구수정. 1999. “‘편장’ 마을 가는 길: 베트남에서 온 편지.” 『당대비평』, 통권 제9호.
- 김기태. 1982.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과 한미관계.”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국어대학교 대학원.

- 김기태. 2002(1987).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일고찰." 『전환기의 베트남』. 서울: 조명문화사.
- 김당. 1994. "월남전 실종자는 '유령'인가." 『시사저널』, 1994. 5. 12.
- 김성은, 채명신, 유양수. 2001. "월남 방어가 곧 한국 방어였다." 월남 참전 주역 특별좌담/ 월남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평가한다. 『월간 조선』, 2001년 10월호.
- 김현아. 2002.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서울: 책갈피.
- 김현아. 2004. 『전쟁과 여성』. 서울: 여름언덕.
- 리영희. 1985. 『베트남전쟁』. 서울: 두레.
- 박균열. 2005.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보훈대책에 관한 연구."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의 영향 재조명 학술회의의 발표 논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11. 17.
- 朴根好. 1993. 『韓國の經濟發展とベトナム戦争』. 東京: 御茶の水書房.
- 박태균. 2006.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 협상과정 - 미국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봄).
- 박홍영. 2000. "한국군 베트남 파병(1961-1966)의 재검토: 릿세의 '행위의 논리' 적용 가능성."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 여영무. 2001. "파월국군 용병론과 양민학살설에 대한 반론." 『군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42호.
- 이기종. 1991. "한국군 베트남 참전의 결정요인과 대외관계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제31집.
- 이삼성. 1998. "미국의 세기와 베트남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서울: 한길사.
- 이선희. 2000. "베트남전쟁의 특수성과 대민피해의 진상."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군사평론가협회.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재조명 토론회 자료집』, 2000. 12. 25.
- 이선희. 2001. "베트남전쟁의 재음미와 참전 한국군." 『한국동북아논총』, 제20집.
- 이용준. 2003. 『베트남, 잊혀진 전쟁의 상흔을 찾아서』. 서울: 조선일보사.
- 임호준. 1994. "월남전에서 한국군 포로 단 한명도 없다?" 『주간조선』, 1994. 5. 5.

- 전상인. 2001. "세계체제 속의 혁명과 전쟁 - 한국과 베트남." 『고개 숙인 수정주의』. 서울: 전통과 현대.
- 전재성. 2005.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미국의 대한 외교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1호.
- 정성진. 2000.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과 영구군비경제." 『경제와 사회』, 통권 제46호.
- 조진구. 2003. "중소대립, 베트남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68." 『아세아연구』(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제46권 4호.
- 지만원. 2000. "베트남전 참전의 의의와 성과 및 교훈."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군사평론가협회.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재조명 토론회 자료집』, 2000. 12. 25.
- 채명신. 2006. 『채명신 회고록 베트남전쟁과 나』. 서울: 팔복원.
- 최동주. 1996.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2호.
- 최동주. 2001.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동남아시아연구』, 제11권 봄호.
- 최병욱. 2003. "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의 실제-지역성과 관련하여." 『베트남전쟁연구총서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한겨레21』. 1999-2000년.
- 『한겨레신문』, 2000년.
- 『한국일보』, 2000년.
- 한홍구. 2000a. "한국과 베트남전쟁." 『내일을 여는 역사』, 제4호.
- 한홍구. 2000b.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군사평론가협회.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재조명 토론회 자료집』, 2000. 12. 25.
- 한홍구. 2003.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통권 제62호.
- 한홍구. 2005. "베트남전쟁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제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의 영향" 재조명』. 2005 베트남전쟁사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홍규덕. 1992a. "파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대 한국 외교정책의 평가." 『국제정치논총』, 제32집 2호.

- 홍규덕. 1992b. "한국의 베트남 파병결정에 관한 연구현황과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창간호.
- 홍규덕. 1999. "베트남전 참전 결정과정과 그 영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서울: 백산서당.
- 홍석륜. 2005. "1960년대 한미관계와 박정희 군사정권." 『역사와 현실』, 제 56호.
- Han, Sungjoo. 1978.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Conflict: An Analysis of the U.S.-Korean Alliance." *Orbis*, Vol.21 No.4.
- Kim, Se Jin. 1970. "South Korea's Involvement in Vietnam a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Impact." *Asian Survey*, Vol.10 No.6.
- Park, Joon-Young. 1981.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South Korea's Vietnam Involvement, 1964-1973." *Korea and World Affairs*, Vol.5 No.3.

Vietnam War in Korean Perspectives:
Issues and Arguments

LEE Han Woo

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Sogang University

There are several perspectives on the nature of the Vietnam War and reasons of dispatch of Korean troops in Korean society. It is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war for the liberal defence against communism and Vietnamese national liberation. As we see the Vietnam War which was escalated into hot war since 1964, thanks to the abrogation of the 1954 Geneva Agreement, we cannot deny that it is the national liberation war.

It is still controversial on reasons why Korean government dispatched troops into Vietnam. Though researchers have argued that its reasons were reward for the American effort to defend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merica's enforcement to dispatch, substitutive dispatch instead of US troops in Korea,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 so far, it is still controversial which one is the main reason. Nevertheless, Korean government tried to maximize its political and economic gains and got impacts on stabilization of the regime and economic growth.

We still have unresolved issues concerned with the Vietnam War. They are Korean veterans' physical or mental injury, missing in action, and massacre of Vietnamese civilia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Vietnam, both sides have already step up their

fraternal relationship. If there is historical fault, we should not cover it, but try to overcome it for the enhanc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Vietnam.

Key Words: Vietnam War, Korean troops, mercenary, massacre, national liberation, economic growth